

2011 국가직 7급 행정학

담당 : 방성은 교수(월비스고시학원 행정학 전임)

<총평>

- 올해 시험은 이전 시험에 비하여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2편 정책 파트에서 회귀불연속설계, 직접성 정도에 따른 정책수단 분류 문제가 그 예입니다. 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론은 기본서에는 없었지만 보충자료로 접해보았던 문제이어서 각 단계별 내용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 하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아주 평이하게 출제되어 평소 기본개념을 통하여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길른 수험생이라면 고득점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옴부즈만인 경우가 어렵게 느껴졌지만 민원제기라는 기본개념이 생각났더라면 정확히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 각 편별로 고르게 출제되었으며 논란이 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편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1. 피터스(B. Guy Peters)의 정부개혁모형 중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 <다음> —

- ▶ 정책기능수행에서 기업가적 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
- ▶ 조직구조에 대한 특정적 처방은 없다.
- ▶ 관리작용의 자율성이 높다.
- ▶ 거버넌스의 평가기준은 창의성과 행동주의이다.

- ① 탈규제적 정부모형
- ② 신축적 정부모형
- ③ 시장적 정부모형
- ④ 참여적 정부모형

해설 : 탈(내부)규제적 정부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탈(내부)규제적 정부모형은 과다한 내부규제(중앙 - 지방 규제, 공무원 규제)를 비판하면서 규제를 축소하고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제고시켜 보다 나은 수준의 정부성과를 강조한다(2011 비타민행정학 287페이지). 답 : ①

* 거버넌스의 주요모형

구 분	전통적 거버넌스	새로운 거버넌스			
	전통적 정부	시장적 정부	참여적 정부	신축적 정부	탈(내부)규제적 정부
문제의 진단기준	진근대적 권위	정부 독점	계층제	영속성(경직성)	과다한 내부규제
조직구조	계층제	분권화	평면조직	가상조직	내용 없음.
관리방식	직업공무원제, 절차적 통제	성과급, 민간기법	팀제, MBO, TQM	일시적 인력관리	관리적 재량 확대
공무원제도	계층제	시장기제로 대체	계층제 축소	임시고용제	내부규제 철폐
정책결정의 기저(바탕)	정치행정의 구분	시장적 동기	협업, 협상	실험적 추진	기업가적 정부
공익의 기준 (국민의 관심)	안정성, 평등	저비용	참여, 협의	저비용, 조정	창의성, 능동성, 활동성
조 정	상의하달	보이지 않는 손	하의상달	조직 개편	관리자의 자기이익
오류 발견·수정	통제	시장적 신호	정치적 신호	오류의 제도화 방지	더 많은 오류 허용

2. 환경규제를 위한 정책수단을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로 나눌 경우,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부과금제도 ② 공해권제도
③ 성과기준제도 ④ 보조금제도

해설 : 명령지시적 규제는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위반시 처벌을 하는 직접적 규제방식인 반면, 시장유인적 규제는 의무를 부과하되 수용시 혜택을 주거나 미수용시 제재를 가하는 간접적 규제방식이다. 부과금 부과, 보조금 지급, 공해권 설정 등은 수용시 혜택을 주거나 미수용시 제재를 가하는 시장유인적 규제이다. 환경기준이나 안전기준과 같이 법령 등에 준수해야 할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명령지시적 규제에 해당된다. 기준은 기술기준과 성과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기준(투입기준, 설계기준)은 환경오염을 방지 또는 제거하기 위한 기술을 갖춘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배기가스 감소장치 부착, 공해발생 물품의 원료나 성분 등에 대한 기준이 그 예이다. 반면 성과기준은 피규제자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환경기준(성과)만을 설정하고 달성방법은 피규제자에게 일임하는 것으로서 공해업체가 배출할 수 있는 수질을 산소요구량(BOD) 몇 ppm이하로 규정하는 것이 그 예이다. 성과기준은 기술기준에 비하여 피규제자에게 넓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지만 공해업체가 배출하는 오염을 항상 측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2011 비타민행정학 77페이지). 답 : ③

* 분야별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최병선)

구분	명령지시적 규제	시장유인적 규제
내용	- 기준이나 규칙 등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시 강제력을 동원하여 처벌	- 어떤 의무를 부과하되 달성방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경제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 유인, 표시, 공개 등
환경규제	· 환경기준의 설정 - 기술기준 ① - 성과기준 ②	· 공해배출 부과금(공해배출세) ④ · 공해권의 경매(거래)제도 ⑤ · 보조금 ⑥

	· 규칙의 제정 ③	
산업안전 및 보건규제	· 안전기준 설정과 공장검사 ⑥ · 보건기준 설정과 공장검사 ⑦	· 안전정보의 제공 ⑧ · 상해세의 부과 ⑨
소비자안전 및 보호규제	· 물품의 안전기준 설정 ⑩ · 허위·과장광고 규제 ·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⑪	· 정보공개 : 표시규제 ⑫, 공시규제 ⑬ · 품질인증제도 ⑭ · 등급사정 ⑮ · 제품 표준화 ⑯
차별규제	· 차별금지 입법 ⑰ · 고용기준 및 쿼터의 설정 (장애인, 여성, 지역 등 할당임용제)	· 정부계약을 통한 유도 ⑱ · 사적 권리의 보호 ⑲

① 기술기준(투입기준, 설계기준) : 환경오염을 방지 또는 제거하기 위한 기술을 갖춘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배기가스 감소장치 부착, 공해발생 물품의 원료나 성분 등에 대한 기준이 그 예

② 성과기준 : 피규제자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환경기준(성과)만을 설정하고 달성방법을 피규제자에게 일임하는 것으로서 공해업체가 배출할 수 있는 수질을 산소요구량(BOD)을 몇 ppm이하로 규정만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성과기준은 기술기준에 비하여 피규제자에게 넓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지만 공해업체가 배출하는 오염을 정부가 항상 측정·감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③ 규칙제정 : 기준설정에 부수하여 기준을 보다 세부화·구체화하고 기준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제정하는 것이다.

④ 공해배출부과금 : 일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공해배출량에 대하여 단위당 일정한 금액을 곱하여 산정되는 부과금을 공해배출업체에게 부과하는 제도로써 세액기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액을 결정하는 방식과 유사하므로 공해배출세라고도 한다.

⑤ 공해권의 경매 : 특정 공해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그 산업의 모든 기업이 합법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공해의 총량을 기준으로 설정한 후, 공해권을 규제기관이 발행하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매하는 제도이다. 물론 기업이 자기가 매입한 공해권 이상의 공해를 배출시 처벌을 받게 된다.

⑥ 보조금 : 정부가 공해기업에 공해의 방지 및 처리 시설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원인자부담원칙에 위배되지만 공해제거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납세자 부담에 의한 보조금 지원이 반드시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⑥ 안전기준설정과 공장검사 : 규제기관이 작업장의 물리적·공학적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고용주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⑦ 보건기준과 공장검사 : 방사선, 분진, 가스, 소음 등과 같이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의 발생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⑧ 안전정보의 제공 : 산업안전과 보건문제가 근본적으로 위험에 대한 근로자의 정보부족에 기인하므로 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⑨ 상해세의 부과 : 규제기관이 근로자의 작업상 상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공해배출부과금제도와 부과방식과 기능이 동일하다.

⑩ 물품의 안전기준 설정 : 인체의 건강이나 생명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만을 생산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식이다.

⑪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기업이 소비자의 약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이다.

⑫ 표시규제 : 품질, 성분, 효능, 성분, 제조일자, 유통기간 등을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게 하는 방식이다.

⑬ 공시규제 : 보험계약, 변호사 고용계약 등의 서비스 공급계약에 대한 정보나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게 하는 방식이다.

⑭ 품질인증제도 : 제품의 품질이 규제기관이 제정한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을 제품에 부착하도

록 하는 방식이다.

⑮ 등급사정 : 품질우열에 상당한 편차가 있을 경우 특정 상품에 대하여 품질등급을 사정하여 그 판정등급을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⑯ 제품표준화 : 상당히 동질적인 제품의 규격, 중량, 용기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소비자가 동종제품의 가격이나 품질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⑰ 차별금지 입법 : 직무와는 무관한 불합리한 근거로 인한 차별을 금지시키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서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률>이 그 예이다.

⑱ 정부계약을 통한 유도 : 정부에 납품을 하거나 정부공사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사회적 약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기준 미달시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⑲ 사적 권리의 보호 : 취업예정자가 자기에겐 불리한 정보(본적, 얼굴사진, 학력 등)의 공개요구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방식이다.

3.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르디외(P. Bourdieu)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계로 정의하였다.
- ② 사회자본은 물질자본 및 인적자본과는 구분되는 자본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 ③ 사회자본은 사용할수록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소유주체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 ④ 후쿠야마(F. Fukuyama)는 국가의 복지수준과 경쟁력은 사회에 내재하는 신뢰수준이 결정한다고 보았다.

해설 : 사회자본의 선순환 또는 악순환된다. 즉 사회자본은 positive sum game의 특성을 지니므로 자기강화적이고 축적되는 경향이 있어 사람들에게 의하여 사용될수록 더욱 증가하는 반면, 사용되지 않을수록 더욱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2011 비타민행정학 164페이지). 답 : ③

2. 사회적 자본의 특성 - 2011 비타민행정학 164페이지

- ④ 사회자본의 선순환과 악순환 : 사회자본은 자기강화적이고 축적되는 경향이 있어 사람들에 의하여 사용될수록 더욱 증가하는 반면, 사용되지 않을수록 더욱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 ⑧ 파지티브섬(positive-sum) 게임 : 시장에서의 교환은 받은 만큼 주는 등가물의 교환이지만, 사회자본을 매개로 한 사회적 교환관계는 다른 경제적 거래처럼 동등한 가치를 지닌 등가물의 교환이 아니다.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라, 파지티브섬(positive-sum) 게임이므로 모두가 사용할수록 더욱 축적되고 증가하며 사용할수록 총량이 늘어나는 특성을 지닌다.

4.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과 민영화보다는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공급을 중시한다.
- ②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가 결합하여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 ③ 가격메커니즘과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강조한다.
- ④ 고객지향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중시한다.

해설 : 시장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은 공동생산(공급)도 작은 정부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공동생산보다는 민간생산(민영화와 민간위탁)을 중시한다. ①은 공동체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신국정관리론에 대한 내용이다(2011 비타민행정학 294페이지). 답 : ①

* 신공공관리론과 신국정관리론

구 분	신공공관리(1980년대~현재)	신국정관리(1990년대~현재)
유사점	- 정부역할 : steering(목표설정) - 공·사 부문 구분의 상대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인정 - 정부개혁(작은 정부, 정부역할 축소) - 시민에 대한 대응성(단, 소극적 대응성 VS 적극적 대응성)	
시대배경	1970년대말 재정위기와 정부실패 ⇒ 공공부문 혁신이라는 정권차원의 이념적 동기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의 지나친 시장주의 ⇒ 신뢰, 협동, 조정 등 민주적 통치역량을 강화
차원	정부가 민간부문과 연결하는 서비스전달만의 변화를 통한 미시적·실용적인 행정개혁 노력	네트워크, 파트너십, 공사협력, 신뢰 등을 강조하는 거시적·민주적인 정치체제에 관한 논의
초점	결과중심의 행정개혁 내부 프로그램 개편	과정과 절차를 강조하여 정부와 사회조직 간 연결과 네트워크 형성
목적	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한 능률성 제고	민주적 거버넌스 역량의 강화
이데올로기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신공동체주의 (신좌파의 시민주의+신우파의 자원봉사주의)
관리기구(주체)	시장주의에 입각한 정부	참여네트워크
관리방식	고객지향	임무중심
관리메커니즘	경쟁으로 서비스 품질의 사후적 확보	신뢰 및 협력과 직접 참여로 사전적 확보
시민관	수동적 객체로서의 '고객' (이기적 존재)	능동적 주체로서의 '주인' (공동체 주인이자 이타적 존재)
관료역할	공공기업가(자율성과 재량권 강조)	네트워크의 관리자, 조정자(제약과 책임 강조)
행정이념	능률성, 생산성	민주성
서비스 생산방식	민영화(privatization), 민간위탁	공동생산(co-production)
지향가치	결과(outcome) - 효율성, 생산성	과정(procedure) - 민주성, 정치성
문제해결 방식	시장적 방법, 민간경영기법 도입	정치적 방법, 다양한 참여자와 새로운 방법 모색
분석수준	조직 내(intra-organizational), 부문 내	조직 간(inter-organizational), 부문 간
재창조	정부재창조	시민재창조
정치·경영 관계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일원론

5. 이스턴(D. Easton)이 정치체제(political system)모형에서 주장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 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 ① 투입(input)
- ② 산출(output)
- ③ 전환(conversion)
- ④ 요구와 지지(demand & support)

해설 : 정책의 기본개념과 체제이론을 결합한 문제이다. 정책(policy)이란 '대부분의 사회구성원과 관련이 있는 공적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생활의 질과 공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활동방침 또는 활동목표'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전체를 위한 가치들의 권위적 배분(D. Easton)하는 활동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즉 정책은 어떤 집단이나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다른 집단이나 사람들에게는 손해를 배분하는 특성을 지닌다. 정책은 체제이론에 의하면 산출(output)에 해당된다. 반면 정책결정은 전환에 해당된다(2011 비타민행정학 358페이지). 답 : ②

6. 다음이 설명하는 정책분석방법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문제를 더 작은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이 요소들을 둘씩 짝을 지어 비교하는 일련의 비교판단을 통해, 각 요소들의 영향력에 대한 상대적인 강도와 효용성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 ① 계층화분석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 ② 교차충격매트릭스방법(cross impact matrix)
- ③ 정책델파이방법(policy delphi method)
- ④ 외삽법(extrapolation)

해설 : 계층화분석법에 대한 설명이다. 계층화분석법은 시스템이론에 기초하여 하나의 문제를 시스템으로 보고 문제를 여러 개의 계층으로 나눈 다음, 네트워크 형태로 구조화하고 각 계층의 요소들이 상위계층의 평가기준들을 얼마나 만족시키는지가를 둘씩 짝을 지어 비교하고 이 평가기준에 따른 대안들의 상대적 선호도 또는 중요도를 숫자로 전환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각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기법으로서 비용편익분석과 함께 많이 사용된다. ② 교차충격매트릭스방법(cross impact matrix)은 교차영향분석의 실시방법이다. 교차영향분석은 행과 열에 잠재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을 나열한 대칭표인 행렬을 사용하여 관련된 선행사건의 발생에 따른 특정 사건의 발생가능성을 주관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예측하는 주관적 기법이다(2011 비타민행정학 507페이지).
답 : ①

7. 다음이 설명하는 연구방법은?

준실험설계방법 중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실험대상을 배정할 때 분명하게 알려진 자격기준(eligibility criterion)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투입자원이 최소화하여 오직 대상집단의 일부에게만 최소자원이 공급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적합하다.

- ①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 ② 회귀-불연속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 ③ 단절적 시계열설계(interrupted time-series design)
- ④ 통제-시계열설계(control-series design)

해설 : 지문의 내용은 회귀-불연속설계에 해당된다. 회귀불연속설계는 실험 전 측정에서 일정한 값을 얻은 자들을 실험집단에, 그 미만의 값을 얻은 자들을 비교집단에 배정하고 실험집단에게 실험적 처리를 가하면 회귀직선의 불연속적 단절상태가 나타나고 그 크기를 가지고 실험처리의 효과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ex) 장학금제도가 학생들의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하고자 할 때 80점 이상 학생은 실험집단, 80점 미만 학생은 비교집단으로 구성하고 실험집단에게 장학금을 주고 1년 후 이들의 성적을 비교.
답 : ②

* 회귀불연속설계

1. 의의 : 정책효과의 평가를 위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설정할 때 명확하게 알려진 계량적인 자격기준, 즉 구분점(cutting point)을 사용하여 회귀직선의 불연속단절을 통하여 정책효과를 파악하는 기법이다(백승기). ex) 장학금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80점 이상을 실험집단, 80점 미만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한 후 실험집단에게 장학금을 준 다음, 1년 후

의 양 집단의 성적을 비교해 볼 때 장학금을 지급받은 실험집단 학생들의 성적이 지급 전에 비하여 불연속적으로 향상되었다면 그 수직적 차이가 효과이다.

2. 유용성 :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실험집단에게만 실험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회귀불연속설계는 명백한 기준만 있으면 되므로 이 경우 적용이 가능하며 어떤 희소한 자원의 분배에 관련된 사회실험의 결과를 점검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법이다.

* **단절적 시계열설계** : 정책결과 변수의 시계열곡선의 단절을 이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는 기법으로서 단절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후의 많은 시계열측정치를 비교하여 정책효과를 판단함으로써 단 1회 측정으로 야기되는 불합리성을 제거할 수 있다. 비교집단을 구성하지 않는 단절적 시계열단순설계와 비교집단을 구성하는 단절적 시계열비교집단설계가 있다. **ex) 1976년 3월 자동차속도규제가 실시되었을 때 1971년~1976년 2월과 1976년 3월~1981년의 교통사고 추이를 비교분석**

8. 살라몬(L. M. Salamon)의 정책수단분류에서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유형에 속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 ㉠ 경제규제(economic regulation)
 ㉡ 보조금(grant)
 ㉢ 바우처(voucher)
 ㉣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s)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보조금이나 바우처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되 시장공급방식을 그대로 활용하므로 가장 직접성이 낮은 정책수단인 반면, 정부의 경제규제나 공기업설립은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므로 직접성이 높은 정책수단이다(2011 비타민행정학 97~98페이지). 답 : ③

□ **정책수단의 분류(Salaman, 노화준)**

1. **의의** : Salaman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기존 행정구조 활용성), 가시성을 기준으로 정책수단을 분류하고 그 임팩트(효과)를 각각 파악하였다. 여기서는 강제성과 직접성만 살펴보기로 한다.
2. **강제성의 정도에 의한 분류** : 강제성이란 제한하는 정도로서 정책수단을 분류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다. 경제규제와 사회규제는 강제성 정도가 높아 효과성은 높으나 관리가능성은 낮은 반면 불법행위책임, 정보, 조세지출 등은 강제성 정도가 낮아 합법성과 정치적 지원은 모두 높으나 형평성과 효과성은 낮다.

강제성 정도	정책수단	정책임팩트(효과)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관리가능성	합법성 / 정치적 지원
낮음	불법행위 책임, 정보, 조세지출	낮음	중간	낮음	중간	높음

중간	바우처, 보험, 보조금, 공기업 지급보증, 라벨부착 요구, 교정조세	중간	높음	중간	중간	중간
높음	경제규제, 사회규제	높음	높음/낮음	높음	낮음	높음/낮음

3. 직접성의 정도에 의한 분류 : 직접성이란 정책수단의 주체가 그것을 수행하는데 관여하는 정도로서 보험, 공기업, 경제규제 등은 강제성 정도가 높아 효과성, 형평성, 관리가능성은 높지만 합법성과 정치적 지원은 낮은 반면 불법행위책임, 보조금, 바우처 등은 직접성 정도가 낮아 능률성과 합법성, 정치적 지원은 높지만 효과성, 형평성, 관리가능성은 낮다.

직접성 정도	정책수단	정책임팩트(효과)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관리가능성	합법성 / 정치적 지원
낮음	불법행위 책임, 보조금, 지급보증, 정부지원기업, 바우처	낮음	높음	낮음	낮음	높음
중간	조세지원, 계약, 사회규제, 라벨부착 요구, 교정조세, 부과금	낮음/중간	중간	낮음	낮음	높음
높음	보험, 직접대부, 공공정보, 공기업, 직접시행, 경제규제	높음	중간	높음	높음	낮음

9. 민츠버그(H. Mintzberg)의 조직유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순구조(simple structure)는 집권화되고 유기적인 조직구조로서, 단순하고 동태적인 환경에서 주로 발견된다.
- ② 기계적 관료제(machine bureaucracy)는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절한 조직형태로서, 주된 조정방법은 작업과정의 표준화이다.
- ③ 전문적 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는 수평·수직적으로 분권화된 조직형태로서,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 ④ 사업부제조직(divisionalized form)은 기능부서간의 중복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사업부내 과업의 조정은 산출물의 표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해설 : ④ 사업부제(할거적 형태, 분할구조)는 단순안정된 환경하의 사업부 중심 조직(Daft의 사업구조)으로서 본사 하나를 두고 서로 이질적인 사업부단위를 모아 연결해 놓고 각 사업부에 자율권을 부여한 조직형태이다. 사후적 결과통제 시스템으로 사업부 간 성과를 대조·비교하게 되며 각 사업부 조직내부의 구조는 대개 기계적 관료제 형태가 많다. 사업부별로 제품과 서비스 또는 고객과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본사에서 자원배분을 달리 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며 거대조직을 분사(分社)한 형태이므로 적응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조직전체 차원에서 공통관리를 하지 않고 각 사업부에서 별도의 관리를 하게 되므로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규모의 불경제 현상이 발생하고, 각 사업부는 재무적 성과에만 의존하므로 본사의 혁신적 측면과 장기적 관점을 소홀히 하게 되고 관리자간 업무영역과 권한 간의 마찰이 발생한다(2011 비타민행정학 617, 701페이지). 답 : ④

10. 테이어(F. C. Thayer)가 주장하는 ‘계서제 없는 조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집단의 연합체 형성
- ② 책임과 권한에 따른 보수의 차등화
- ③ 집단내 또는 집단간 협동적 과정을 통한 의사결정

④ 모호하고 유동적인 집단과 조직의 경계

해설 : 세이어(F. Thayer, 1973)는 계서제의 원리가 타파되지 않는 한, 진정한 조직혁명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서제의 대안이 무정부상태라는 기존 관념을 부인하고 소외와 경쟁을 악순환시키는 계서제를 완전히 타파하고 소집단의 협동과정을 중시하는 비계서적 조직을 제시하였다. 그는 승진제와 보수차등의 철폐를 주장하였으며 누가 어느 자리로 가느냐는 승진절차가 아닌, 집단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며(승진개념의 소멸), 일하기를 원해서 하는 자아실현적 인간형을 상정하고 일과 보수를 분리함으로써 구성원 간 보수를 균등하게 한다(2011 비타민행정학 716페이지). 답 : ②

11. 현행 「전자정부법」상 행정기관이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행정기관 편의의 증진
- ② 행정업무의 혁신 및 효율성의 향상
- ③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의 확보
- ④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해설 : ① 행정기관 편의 증진이 아니라 국민 편의 증진이다(2011 비타민행정학 838페이지). 답 : ①

③ 전자정부의 원칙(전자정부법 제4조, 2010. 5. 개정) - 2011 비타민행정학 839페이지

- ㉠ 행정기관 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 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 ㉡ 정보기술 아키텍처 기반원칙 : 행정기관 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행정기관 확인원칙 : 행정기관 등은 상호 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개인정보 보호원칙 :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2. 직위분류제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다.
- ② 직무중심의 인사행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 ③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는 데 용이하다.
- ④ 현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수요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해설 :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는 직무를 중심으로 공무원을 분류하는 제도로서

직무의 종류와 책임의 수준을 중·횡으로 구분하여 직위의 분류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직위분류제는 종신고용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사라지거나 특정 직무가 없어지면 그 직무 담당자도 필요 없게 되므로 신분보장이 약하게 되며 이에 따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장애가 된다. 특히 개방형이라는 특성은 직업공무원제에 부적합하다(2011 비타민행정학 1002페이지). 답 : ③

13. 직무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과 ㉡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에서 등급기준표를 미리 정해 놓고 각 직무를 등급정의에 비추어 어떤 등급에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해 나간다. 미리 정한 등급기준이 있다는 점에서 (㉡)과 구분되지만, 양자는 직무를 포괄적으로 취급하고 수량적인 분석이 아닌 개괄적 판단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 | | ㉠ | ㉡ |
|---|-------|-------|
| ① | 분류법 | 서열법 |
| ② | 분류법 | 요소비교법 |
| ③ | 서열법 | 분류법 |
| ④ | 요소비교법 | 분류법 |

해설 : ㉠은 분류법에 대한 내용이다. 분류법은 서열법과 같이 직무요소에 대한 분석 없이 직무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지만, 등급분류 기준을 정의한 등급기준표를 미리 정해놓고 각 직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특정등급에 배치하여 그 등급에 해당되는 모든 직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본급을 정하는 방법이다. ㉡은 서열법에 대한 내용이다. 서열법은 가장 간단하고 일찍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각 직위가 가지고 있는 직무의 곤란도나 책임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직위 간 서열을 정하는 방법이다. 즉, 직무의 구성요소를 구별하지 않고 각 직무의 상대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서열을 결정하는 주관적인 방법이다. 양자는 비계량적 분석이므로 직무를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고 개괄적, 종합적으로 판단한다(2011 비타민행정학 1007페이지). 답 : ①

14.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에는 장관도 포함된다.
- ②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기금제(pre-funding system 또는 funded plan)를 채택하고 있다.
- ③ 기금제는 운용·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 ④ 기금제를 채택하는 경우 기금 조성의 비용을 정부에서 단독 부담하는 제도를 비기여제(non-contributory system)라 한다.

해설 : 기금제는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미리 기금을 마련하고 이 기금과 기금의 운용·투자에서 얻어지는 이자 및 사업수익을 연금에 충당하는 제도로써 연금수익을 얻는 장점이 있는 반면, 초기에 기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개시비용이 크고 운영이 복잡하므로 운용 및 관리비용이 크며 일정기간 경과시 초과지출로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2011 비타민행정학 1134페이지). 답 : ③

15.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경직성이 강하다.
- ② 조세지출의 주된 분류방법은 세목별 분류로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③ 조세지출은 세출예산상의 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초래한다.
- ④ 과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인상을 위한 정책판단의 자료가 된다.

해설 : 조세지출예산은 정책적인 세금 감면조치인 조세지출로 인한 세수 감소액을 종합·분류하여 체계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조세감면 내역과 재정지출 구조가 일치되므로 의회 심의과정에서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시켜 파악하기 용이하다. 따라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 세목별로 조세지출 내역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모두 일차적으로 세목별 분류방식을 사용하고 있다(2011 비타민행정학 1304페이지). 답 : ②

16. 각 부처의 예산요구에 대한 중앙예산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대응전략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도액 설정법(fixed-ceiling budgeting) - 각 부처에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고 중앙예산기관은 예산사정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② 우선순위명시법(priority listing) - 각 부처는 예산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책정함으로써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을 사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③ 항목별 통제법(item-item control) - 전체 사업의 관점에서 개별 사업을 검토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 ④ 증감분석법(increase-decrease analysis) - 모든 예산항목을 매년 재검토할 필요는 없지만, 각 기관에 필요한 기본 예산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설 : 비교증감방식(증감분석법)은 현재연도 예산보다 일정한 비율만큼 다음연도 예산액을 증감하는 방식으로 모든 예산항목을 매년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정기관은 감소된 항목보다 증가된 항목에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각 기관에 필요한 기본 예산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검토가 등한시되는 단점이 있다(2011 비타민행정학 1360페이지). 답 : ④

*** 예산사정방식 - 2011 비타민행정학 1360페이지**

1. 정책·사업지침 방식 : 각 부처에 지침을 시달하고 주요 사업에 관하여 대안 또는 타당성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방식
2. 현 연도기준 방식 : 현재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작성하는 방식 | 점증주의 예산
3. 무제한예산 방식 : 사용빈도가 가장 적은 방식으로, 예산요구 시 항목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각 부처의 판단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가 용이하고 희망하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정기관이 예산삭감의 모든 부담을 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4. 한도액설정 방식 : 예산의 한도액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하급기관의 예산요구가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하급기관에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상대적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함으로써 사정기관이 예산사정에 도움을 받는 장점이 있지만 한도액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 곤란하다. | 총액배분자율편성제
5. 우선순위표시 방식 : 예산항목이나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예산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정기관이 예산을 삭감할 때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부터 배제함으로써 예산사정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예산 항목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 영기준예산
6. 항목별 통제 방식 : 예산항목을 일일이 검토하여 예산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사업의 관점에서 개별 사업들을 검토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 품목별 예산
7. 업무량단위원가 측정 방식 :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량에 단위원가를 곱하여 예산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정밀한 계량적인 측정을 바탕으로 예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사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업무단위와 단위원가의 결정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 성과주의 예산
8. 비교증감 방식 : 현재 연도 예산보다 일정한 비율만큼 다음 연도 예산액을 증감하는 방식으로 모든 예산항목을 매년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정기관은 감소된 항목보다 증가된 항목에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각 기관에 필요한 기본 예산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검토가 등한시되는 단점이 있다. | 점증주의 예산

17. 윌다브스키(A. Wildavsky)가 부(wealth)와 재정의 예측성(predictability)을 기준으로 분류한 예산과정형태 중에서, 경제력은 낮으나 재원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서 미국의 지방정부에서 많이 발견되는 형태는?

- ① 점증예산(incrementalism)
- ② 대체점증예산(alternating incrementalism)
- ③ 반복예산(repetitive budgeting)
- ④ 세입예산(revenue budgeting)

해설 : 양입제출적(revenue) 형태(세입예산)는 미국의 시정부와 같이 재정에 예측력은 높은 반면, 경제력이 빈곤한 경우에는 세입을 먼저 예측하고 그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형태를 의미한다(2011 비타민행정학 1277페이지). 답 : ④

*** Wildavsky의 예산결정형태 유형론 - 2011 비타민행정학 1277페이지**

구 분		국가의 경제력	
		부 유	빈 곤
재정의 예측력	높 음	점증적 형태	양입제출적 형태
	낮 음	보충적 형태	반복적 형태

- (1) 점증적(incremental) 형태 : 재정예측력도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들은 예산내용이 복잡하고 참여자들이 다양하며 예산결정체제가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점증적 형태를 띠게 된다.
- (2) 양입제출적(revenue) 형태 : 미국의 시정부와 같이 재정예측력은 높은 반면, 경제력이 빈곤한 경우에는 세입을 먼저 예측하고 그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 (3) 보충적(supplemental) 형태 : 중동의 산유국과 같이 국가경제력은 부유한 반면, 행정능력의 미흡으로 재정예측력이 미흡한 경우 필요에 따라 계속 보충해 가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 (4) 반복적(repetitive) 형태 : 후진국과 같이 국가경제력과 재정예측력 모두 낮은 경우 반복적인 예산결정형태가 나타나게 되며, 행정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예산기관은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18. 현행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은?

- ① 부단체장
- ② 사업소
- ③ 출장소
- ④ 읍면동

해설 : 보조기관은 부단체장과 행정기구 및 공무원(실장, 국장, 과장 등)이다.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은 소속 행정기관이고 일반구와 읍면동은 하부행정기관이다(2011 비타민행정학 1500페이지). 답 : ①

19. 아른슈타인(S. R. Arnstein)이 분류한 주민참여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유(placation)는 주민이 정보를 제공받고, 각종 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제시, 권고하는 등의 역할은 하지만, 주민이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은 갖지 못하는 수준이다.
- ② 정보제공(informing)은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정보회로가 쌍방향적이어서 환류를 통한 협상과 타협에 연결되는 수준이다.
- ③ 대등협력(partnership)은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기관에 맞서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수준이다.
- ④ 권한위임(delegated power)은 주민이 정책의 결정·실시에 우월한 권력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로, 주민의 영향력이 강하여 행정기관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주민을 협상으로 유도하는 수준이다.

해설 :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답 : ②

* 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론 - 2011 비타민행정학 단과 보충자료

성 격	단 계		내 용
주민권력 (실질적 참여)	8단계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들이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및 평가단계까지 주민이 통제한다.
	7단계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대하여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6단계	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다.
형식적 참여	5단계	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되지만 최종적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4단계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
	3단계	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비참여	2단계	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분출시켜 치료하는 단계로서 행정의 일방적 지도에 그친다.
	1단계	조작단계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교육·설득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데 그친다.

20. 옴부즈만(Ombudsman)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옴부즈만의 개인적 신망과 영향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 ②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 ③ 다른 통제기관들이 간과한 통제의 사각지대를 감시하는 데 유용하다.
- ④ 옴부즈만은 직권으로 조사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의 요구나 신청에 의해 활동을 개시하기도 한다.

해설 : 옴부즈만(Ombudsman)이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과 불평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민원제기에 의하여 활동하지만 민원제기가 없더라도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민원신청에 의한 조사만 허용된다(2011 비타민행정학 1630페이지). 답 : ④